

투데이 칼럼

자기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운동, 이제는 국민 속으로 들어와야 할 때

드디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서명 이후 66년 만에 미국 대통령직 신분으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났다. 한반도 평화에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판문점 뉴스로 가려져 있지만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정부하에서 노동조직의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 결국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지만 아직까지 말들이 많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법밖에 존재하는가, 법을 어기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노동운동이라는 게 언제 법안에서만 활동한 적이 있는가. 강한 자본과 권력에 맞서 싸우다 보면 법안에서만 투쟁을 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운동은 늘 권력과 불편한 긴장 관계를 이어왔다. 우리가 지금 노동자로서 누리고 있는 여러 노동자로서의 권익이 그런 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쉽게 간과하고 있지만 노조의 존재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어느 사회가 노동자의 권익을 알아서 챙겨준 적이 있는가. 사실상 없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때 겨우 권력과 자본이 불편한 관심이라도 가져왔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정치가 타락할 때 가장 가열차게 그 부당함에 맞선 이들도 노동자고 그 조적이었다. 87년도 그러했고 지난 촛불 때도 그러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직을 쉽게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일에 주의해야한다.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문재인 정부가 노동조직의 생각만큼 노동자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한다. 노동자조직으로서 이를 반대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직 또한 존재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어느 사회가 노동자의 권익을 알아서 챙겨준 적이 있는가. 사실상 없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때 겨우 권력과 자본이 불편한 관심이라도 가져왔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정치가 타락할 때 가장 가열차게 그 부당함에 맞선 이들도 노동자고 그 조적이었다. 87년도 그러했고 지난 촛불 때도 그러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직을 쉽게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일에 주의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조직의 생각만큼 노동자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한다. 노동자조직으로서 이를 반대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직 또한 존재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어느 사회가 노동자의 권익을 알아서 챙겨준 적이 있는가. 사실상 없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때 겨우 권력과 자본이 불편한 관심이라도 가져왔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정치가 타락할 때 가장 가열차게 그 부당함에 맞선 이들도 노동자고 그 조적이었다. 87년도 그러했고 지난 촛불 때도 그러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직을 쉽게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일에 주의해야한다.

대한민국이란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많은 진보주의자들이나 좌파주의자들은 세상이 혁명처럼 바뀌길 원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혁명정부가 아니다. 다수의 온건한 상식을 지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온건 보수 내지 온건 진보파의 정부다. 대화를 중시하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지향하는 정부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런 정부의 노사정대화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노사정 복귀를 거부하고 거리투쟁만 이어갔다.

정부가 조금 더 노동친화적인 정부가 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노조 또한 시대에 맞게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면 정부는 노조를

다 결국 외면받는다. 정부가 국민과 노조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과 동일한 산에 존재하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노동운동이 제대로 된 자기성찰이 있는지 또한 고민해야 한다. 늘 약자라는 프레임에만 스스로를 가둬 정작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반복되는 희생을 자초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후보시절 분명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더 강경했던 다른 후보를 누르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허나 현 정부 내내 민주노총의 대화참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이어지는 강경한 투쟁소식만 들렸다. 이런 민주노총의 모습을 대부분이 노동자이기도 한 국민들이 과연 동의하고 있을까?

앞서 밝힌대로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은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다. 하지만 내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화와 타협의 문화는 어용종으로 매도되며 모 아니면 도의 노선만을 지속적으로 걸으며 끊임없이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강경한 노동운동의 현실이다.

노동운동도 조금만 국민속으로 한 발 더 들어올 수는 정병 없는가.

독자재언

위험천만 빗길, 안전운전 수칙은?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태풍 등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곤 한다. 비가 많이 오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빗길운전이다. 평소보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선을 벗어나거나 우산을 쓴 보행자를 쉽게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빗길에서 안전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해야 한다. 젖은 노면을 달릴 때 수막현상이 생기기 쉽고, 이는 차를 제어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타이어의 공기압은 10% 정도 더 높여주는 것이 좋다.

다음은 서행운전이다. 빗길에서는 달리는 차의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차량 간 거리를 평소보다 1.5~2배 정도 두고 감속하며 운행해야 한다. 또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가 차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간미러라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이 좋다.

보행자 또한 우산으로 시야가 좁아지고, 빗소리도 인해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에는 우산을 높이 들어 좌우를 잘 살펴보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빗길에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행자 모두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서 사고 없는 안전한 여름 보내기를 바란다.

최혜진 교항경찰서 경무계 순경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에티오피아계 이스라엘인 "발포 경찰 처벌하라"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경찰이 시위 중인 한 남성을 연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근처에서 에티오피아계 19세 청년 솔로몬 데카가 비탄이던 한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해 지역사회 운동가들이 3일 거리 시위를 재개하면서 이스라엘 경찰은 이에 대응하고 있다.

사설

지역발전 약속 사업들 행방 묘연

전북도가 대도약을 말하고 있는 나날이다. 그런데 지역발전을 약속한 사업들 중에는 이상한 것이 적지 않다. 사업 발굴과 함께 청사진 그리기가 요란했는데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까닭이다. 지역발전을 약속한 사업이라며 목수를 크게 내고도 뒷심 발휘가 없다. 슬그머니 찾아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곤란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지난날의 보도가 다시 생각난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사업들을 발굴했던 거에 짊어볼 바가 있다고 도내 언론사들이 이 구동성으로 말한 거 말이다.

사업 발굴 후 많은 날들이 지났으면 추진과 연결돼야만 하는데 그게 없으니 답답하다. 그 한 예로서 저번에 등부권의 발전 플랜이 있었는데 어찌됐는지 궁금하다. 정부의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사업에 발을 맞추려던 발굴 작업 말이다. 현재 그에 힘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애써 발굴해왔던 후속 작업이 없다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이같은 언급은 전북발전연구원을 책임지는 게 결코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

도 구체적인 후속 작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하는 지적이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추진되도록 전북도가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전북도의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 뒷심 발휘가 늘 아쉽다. 전북도는 가일층 노력해야겠다. 사업발굴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발굴 그 자체에만 의미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이 실제로 본 궤도에서 올라서야만 한다.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획득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모든 사업은 돈이 맡을 하게 돼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와 지원을 획득해야만 한다. 그게 없다면 지역의 낙후는 계속될 게 뻔하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항상 여 일하다. 그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해 각각의 사업들이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것이다. 지역 발전 사업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 바란다. 젊은이들은 고대하고 있는 까닭이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고용도 안정돼야만 여기 남아서 살기로 작정할 것이 아닌가 이렇다. 따라서 사업 발굴은 청사진 그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전북형 일자리 확보로 인구감소 막아야

전북도는 일자리 확보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듣던 중 반가운 발언이었다. 전북형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아예 이상하다. 저번에 도내 취업률이 상승했다는 반짝 보도가 있었지만 그게 그뿐이지 않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전국 꼴찌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마를 짊어주었다. 취업률이 상승했다 해도 전국 최하위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 확보로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내 고용 동향을 장기적으로 보자면 안타까울 뿐이다. 정말이지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를 구축하는 가운데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군산 경계를 살리기 위한 행보도 힘차야겠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보도인데 전북도의 움직임이 기대했던 것보다 활발하지 않다. 도내 취업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끌어올

려 보려는 움직임이 눈에 보인다.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로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오래전부터 수차례 언급했거니와 전북도는 도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관할은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 데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밀바다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군산을 비롯해 전주와 익산 등 여러 곳에서 실업자가 많은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실업자 증가 때문에 도민들은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형 일자리 창출은 목숨이 많아야 한다. 늘 배가 고프다는 정신태도를 가져야 한다. 적당히 성과를 내는 정도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전북도가 먼저 잘 알고 있으려니와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안정은 전북도가 발 벗고 나서야 미땅하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마다 참담함을 느껴야 한다. 전북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전북도는 획기적인 구상과 방침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